

##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 [ 경제민주화 ]

모든 국민들이 100% 행복한 나라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하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새누리의 진단

-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에 처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
-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
- 유통업,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기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 새누리의 진단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화되어 있어, 법 집행의 견제경로가 없음.
- 집행체계를 다양화하여 외부 견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확대·강화할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 개정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 새누리의 진단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
- 총수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음.

### 새누리의 약속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 새누리의 실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새누리의 진단

- 신규 순환출자가 대규모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투명한 지배체제 구축 수단으로 악용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장치가 미흡
-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기능도 활성화될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

## 금산분리 강화

### 새누리의 진단

-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 상존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
-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 「은행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 등 개정